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서

2023년 7월 19일 수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江原日報	02면	5년간 운영 예산 '46억원' 필요 도의회 지역상담소 적절성 ...	1
江原日報	03면	김진태 지사에게 정책 질의하는 임미선 도의원	2
강원도민일보	03면	"강특법 개정안 시행령 제정 도 행정역량 결집 나서야"	2
江原日報	03면	"道, 출산·양육 무관한 사업 인구정책 포장"	3
KBS 춘천	온라인	농업진흥지역 해제 3년 안에 가능?...“3차 개정에 반영”	4
KBS 춘천	온라인	학교 인근 ‘마약’ 상호 정비 조례 발의...실효성 논란도	5
강원도민일보	02면	강원특자도 제2청사 시대 '강릉 발전안' 모색	6
江原日報	03면	민주당 도당 홍보소통위원장 이지영 도의원 임명 조직 강화	6
강원도민일보	08면	원주여성인력개발센터 '경단녀 취업' 산실	6
江原日報	10면	홍천 북방농공단지 착공	7
江原日報	02면	도의회 접경지 개발지원특위 하반기 도내 사업 점검 나서	7
강원도민일보	02면	특화단지 신청조차 못한 강원, 첨단산업 경쟁 밀릴까 근심	8
강원도민일보	01면	정선 산사태 주민 긴급대피, 영서남부 '심각' 경보	8
江原日報	04면	생계 지키다 급류 휩쓸렸는데 수해 피해자 아니라고?	9
江原日報	01면	비 더 오면 버틸 수 있을까	10
江原日報	01면	39개 마을 '비만 오면 붕괴될까' 불안	10
江原日報	01면	GTX-B 노선 춘천 연장 막바지 검토 ... 국비 반영에 사활	11
江原日報	02면	오색케이블카 9월 모든 절차 끝난다	11
江原日報	04면	국비 매칭사업 급급 킬러 콘텐츠가 없다	12
강원도민일보	04면	민사고 대안학교 전환 배경 '정치영향 탈피 vs 지역선발 회...	13
강원도민일보	04면	고성 통일전망대 220m 출렁다리 조성 본격화	14
江原日報	02면	“연이은 비에 손님 뚝” 雨환에 잠긴 전통시장	14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차상찬 선양 사업 기대 크다	15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지역소멸대응기금 축소 신중해야	16
江原日報	19면	[사설] 혈세 새는 실업급여 부정 수급, 이제는 손볼 때다	17
江原日報	19면	[사설] 전통시장 경쟁력, 시장별 장점 살린 특화에 달려	18

江原日報

2023 07 19 ()

02

5년간 운영 예산 '46억원' 필요 도의회 지역상담소 적절성 논란

21일 본회의 표결을 앞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 조례'를 두고 적절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권혁열 도의장이 18일 설치 여부와 관련, 의견을 교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고 시민사회단체 등은 21일 본회의 당일 조례 철회를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예고한 상태다.

지난 10일 상임위를 통과한 이 조례는 시·군에 도의회 지역상담소를 설치하고 민원상담관을 위촉해 지역민원 및 정책 건의를 수렴하는 제도다. 문제는 지역상담소 운영비로 연간 수억원이 투입된다는 점이다. 지역상담소 1곳당 1년 운영예산은 4,800만원 가량으로 추산되며 도입 시 첫째 11억7,000만원, 내년부터 매년 8억6,400만원씩 향후 5년간 46억원 이상이 필요하다.

현재 전국 광역시·도 중 도의회 지역상담소를 운영 중인 곳은 경기와 충남 2곳뿐이다.

경기가 1곳당 4,100만원, 충남은 2,500만원의 예산을 투입, 강원자치도가 1곳 당 가장 많은 돈이 든다. 지역상담소 제도를 운영했던 세종은 현재 폐지했으며, 전남은 올 3월 관련 조례를 추진하다 반대 여론으로 보류한 상태다.

반대 측의 입장은 분명하다. 도의원 개인 사무소로 변질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효과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역상담소를 운영 중인 경기도는 1곳당 한 달 평균 상담이 9건, 충남은 4건에 불과하다.

도의회 내부에서도 찬반이 엇갈린다. A의원은 "특별자치도 출범 후 지방자치 실현이 필요하고 여러 분야의 민원이 예상돼 더욱 필요하다"고 밝혔다. B의원은 "강원자치도처럼 넓은 곳에서는 지역상담소를 두고 민원을 듣는 것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반면 C의원은 "운영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상담소가 아니더라도 민원을 제기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지적했다. 최기영·이현정기자

江原日報

2023 07 19 ()
03

김진태 지사에게 정책 질의하는 임미선 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18일 본회의장에서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임미선(국민의힘·비례) 의원이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에게 강원도 인구 정책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 박승선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 07 19 ()
03

“강특법 개정안 시행령 제정 도 행정역량 결집 나서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
김 지사 3차 개정안 후속작업 약속
행안부 오늘 강특법 시행령 회의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시행령 제정과 관련해 “강원도 행정역량을 결집해달라”는 당부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길수(영월) 의원은 18일 제32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의 도정질문에 나서 “시행령을 잘 만들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김 의원은 농지·환경 특례의 3년 존속 기한을 언급하며 “3년 내 시행하면서 효과성을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영구적 권한을 받으려면 재평가를 받아야 하고, 이같은 평가는 시행령으로 정한다”고 시행령 제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도와 시·군이 특별법을 통해 개발의 물꼬를 트려했던 대관령 산악관광, 고성 통일전망대 개발사업 등은 산지 개



김길수 의원 조성운 의원



이영욱 의원 임미선 의원

김진태 지사는 이날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강원도 정치력도 한껏 고양됐다”고 시행령 제정, 3차 개정안 통과 등 후속작업을 약속했다. 또, 농업진흥지구 해제 등과 관련, “시·군별 경쟁이 예상된다”는 김 의원 발언을 의식하며 “사업을 할 때 지역별 갈등 소지가 있는 게 힘이 든다”며 “영동과 영서, 각 지역이 뚫릴 땐 좋겠다”고 했다.

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세종시에서 19일 오전 환경부, 농림축산식

발 경사도 완화 등 특별법 시행령 제정이 필요하다. 이같은 기준을 바꾸지 못하면, 개발 관련 인·허가를 일괄처리할 수 있는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도 무용지물이다.



18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임미선 의원의 질의에 김진태 도지사가 답변하고 있다. 서영

품부 등 주무부처와 강원특별법 시행령 관련 회의를 연다. 박용식 도 특별자치국장은 “시행령 제정에 강원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성운(삼척) 의원은 강원도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인재 양성 방안을 두고 “대기업 협력방안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광열 도 경제부지사는 “인력

과 장비를 공유하는 방법을 두고 삼성과 이야기하고 있다”며 “가을 즈음 되면 대략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

이영욱(홍천) 의원은 최근 특수목적고에서 농어촌 자율학교로 전환된 강원외국어고등학교의 입학 정원축소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내년도 신입생 모집 활동을 보면 학교가 아닌 기숙형 입학원 그 이상 이하고 아니라고 느껴

진다”며 “도내 시·군의 고등학교와의 윈윈(win-win·상생)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교육청에 주문했다.

임미선(비례) 의원은 강원도 위케이션(work+vacation, 일+휴가) 사업과 관련해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업무 환경 조성”이라며 “도내 빈집, 폐교 등을 활용해 사무실을 구축하면 좋겠다”고 빈집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이설화

2023 07 19 ()
03

江原日報

“道, 출산·양육 무관한 사업 인구정책 포장”

도의회 도정질문서 강한 질타

“현금 지원보다 일·가정 양립”

관련 사업 재점검 필요성 제기

돌봄 인프라 부족 등도 꼬집어

속보=소멸 위기에 놓인 강원특별자치도의 인구 정책 방향이 적절한가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연이어 나왔다.

조성운(국힘·삼척) 도의원은 18일 열린 강원자치도의의회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 질문을 통해 도내 어린이집 10곳 중 4곳에 0세반이 없는 상황(본보 6월30일자 4면 보도)에 대해 따져 물었다. 또 현금보다 돌봄센터가 출산율을 높이는데 도움(본보 5월11일자 4면 보도)이 된다고도 강조했다. 조 의원은 “출산을 제고를 위해 지원금보다 돌봄교실 등 인프라가 중요할 수 있다”며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선 0세반 부담이 크고 맞벌이 부부는 어린이집을 찾다가 한 명이 직업을 포기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경희 도 복지국장은 “특히 농어촌 지역의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인건비 지원과 함께 관

계자들과 소통해 대안을 찾겠다”고 답변했다.

강원자치도 인구정책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임미선(국힘·비례) 의원은 “출산, 양육과 무관한 사업이 해당 사업으로 포장돼 있어 문제이며 현금 지원보다 일·가정 양립 지원이 더 필요할 것”이라며 “적지 않은 예산과 사업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하락 추세가 이어진다는 것은 관련 사업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 김진태 지사는 “육아기본수당은 도에서 지출하는 단일 사업 중 가장 큰 재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어떻게든 인구 감소를 막으려 하고 있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일자리 마련, 그다음에 교육, 또 복지정책으로 보고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강원형 농어촌 자율학교로 지정된 강원외고의 신입생 모집을 위한 홍보 활동에 대해 이영욱(국힘·홍천) 의원은 기숙형 입시학원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강원형 농어촌 자율학교와 지역 소멸 보루에서 있는 지역 학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길수(국힘·영월) 의원은 강원자치도 출범과 법령전부개정 사항, 법령시행일인 내년 6월8일까지의 준비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31개 조례 제정사항에 대해 집행부서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의원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설명회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현정기자 together@kwnews.co.kr

2023 07 18 ()

KBS 춘천

농업진흥지역 해제 3년 안에 가능?...“3차 개정에 반영”



[앵커]

강원특별법에는 강원자치도가 넘겨받은 특례를 3년으로 제한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특히 절대농지로도 불리는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절차가 복잡해 보장된 기한 안에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도 이런 한계를 인정하고 3차 법 개정 시, 반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성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올해 5월 말, 국회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

강원자치도는 농사 이외에 개발과 용도 변경이 크게 제한됐던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권한을 가져오는 특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특례 적용 기한은 3년으로 제한했습니다.

3년 제한 조항이 법 제정 때부터 아예 없었던 제주특별자치도법과는 차이가 큼니다.

정부의 난개발 우려로 강원특별법이 한시법이 된 건데, 3년 제한 조항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김길수/강원특별자치도의의원 : "시장·군수님이 관할구역 조사해서 진흥계획 수립하고, 주민 의견 수렴하고, 그 다음에 지사님한테 이거 보내면 그럼 또 우리 도에서는 농정협의회 심의를 거치게."]

실제로,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의 경우, 수해 복구 사업을 위해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추진됐지만, 9가지 절차를 이행하는 데만 꼬박 2년이 걸렸습니다.

강원도 내의 수많은 농업진흥지역 해제 대상을 검토하고, 절차를 추진하기에 3년이라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강원자치도는 올해 말, 추진하고 있는 강원자치도법 3차 개정안에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넣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용식/강원특별자치도 특별자치국장 : "그것(절차 간소화 조항)을 넣을 생각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도민설명회 다니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들어감으로써 그 효과가, 저희가 권한을 이양받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특히, 강원도는 고시 기간 축소와 여러 인허가 과정을 원 스톱으로 해결하는 '의제 처리' 추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박성은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

박성은

2023 07 18 ()

KBS 춘천

학교 인근 '마약' 상호 정비 조례 발의...실효성 논란도



[앵커]

최근, 사회 곳곳에서 마약 범죄가 적발되는 등 마약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학교 주변의 '마약' 관련 간판이나 상품명을 조사하고 관리하는 내용의 조례안까지 발의됐습니다.

하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춘천의 한 초등학교 근처에 위치한 국밥집.

노란 간판에 마약이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종독성 있게 맛있다는걸 은유적으로 표현한겁니다.

원주의 한 중고등학교 앞의 분식집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상호에 '마약'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이 가게는 학교로부터 200미터 안,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강원도 내 '마약'이란 단어가 들어간 상호를 가진 업체는 수십 곳에 이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에는 학교 근처에선 '마약' 용어 사용 광고를 관리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학생들이 '마약'이란 말에 익숙해져 경각심이 낮아질 수 있다는 취집니다.

이를 위해 교육감이 실태조사와 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박윤미/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 "청소년 마약 범죄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마약이라고 들어간 글자 때문에 친숙했던 이미지가 좀 더 경각심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하지만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체들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전국 가맹 형태의 음식점은 당장, 상호명을 바꾸는 일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선을 한다해도 돈이 드는데 실질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식당 주인 : "최우선적으로는 인지도가 없어진다. 다시 시작하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단골들도 간판 바꾸면 떠나가고 그렇게 될까 봐."]

실제로 국회에 유사한 내용의 법안 3건이 발의돼 있지만, 상표권과 영업권 침해 등의 논란 속에 계류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의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21일 강원도의의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KBS 뉴스 하초희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

하초희

강원도민일보

강원특자도 제2청사 시대 ‘강릉 발전안’ 모색

내일 강릉시·본지 주최 전략 포럼

미래산업 육성·파급효과 확대 논의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 본부 개청을 앞두고 강릉시와 영동지역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담론의 장이 마련돼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릉시와 강원도민일보사가 주최·주관하고 강원특별자치도, 도의회, 강릉시의회가 후원하는 ‘강원특별자치도 개막 제2청사 개청-강릉발전 전략 포럼’이 오는 20일 강릉원주대 산학협

력관 대강당 203호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포럼은 강원도가 628년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변경되고, 때마침 도 제2청사인 글로벌 본부가 강릉 지역에 동지를 틀게됨에 따라 지역발전 전략을 함께 모색하고 파급효과를 동해안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김종석 강원도민일보회장이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의 대응과 과제’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이훈 한양대 교수(전 한국관광학회장)가 ‘해양관광과 강릉관광, 무엇을

2023 07 19 ()
02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를 김석중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강원특별자치도 시대, 강릉미래산업 육성방향’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

이어 박홍식 강릉원주대 명예교수가 좌장이 되어 지평토론을 이어 간다. 토론에는 김종욱 강릉부시장, 심오섭 강원도의원, 윤희주 강릉시의원, 강신수 가톨릭관동대 대외협력처장, 김남수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최근표 강원도립대 기획홍보처장 등이 나서 ‘관광과 산업분야’에 대해 심도 깊은 토의를 갖는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 본부는 오는 24일 개청되며 청사에는 미래산업국, 관광국, 해양수산국 등 3개국 280여명이 근무하게 된다. 홍성배

江原日報

2023 07 19 ()
03

민주당 도당 홍보소통위원장

이지영 도의원 임명 조직 강화

운영위서 85명 복당 승인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이 18일 도당 회의실에서 제7차 운영위원회회의를 갖고 도당 홍보소통위원장에 이지영 도의원을 임명하는 등 조직 내실을 다졌다.

도당은 이날 운영위원회에 김형기 속초-인제-고성-양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당원자격심사위원회 강선희 춘천갑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평화안보경제특별위원회장에 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 평화경제특별위원회장에 구인호 도당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을 임명했다.

또 윤리심판원을 새롭게 구성하고 85명 복당심사 승인을 의결했다.

이현정기자 together@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3 07 19 ()
08

원주여성인력개발센터 ‘경단녀 취업’ 산실

아동 돌봄 전문가 양성사업 추진
교육 참여 70여명 중 40여명 취직

원주여성인력개발센터가 지역·산업 맞춤형 아동 돌봄 전문가 양성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지역·산업 맞춤형 아동 돌봄 전문가 양성사업에는 70여명의 경력단절 여성이 교육을 받았으며 지난 6월말 현

재 40여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임성희 원주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은 “지역·산업 맞춤형 아동 돌봄 전문가 양성사업은 경력단절 여성에게 교육 제공과 취업 지원에 목표를 두고 있다”며 “원주시와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공동개최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원주여성인력개발센터는 최근 양성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박윤미 도의원, 김연식 주택관리공단 강원지사장, 윤수경 강원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박병구 큰나무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버넌스를 개최하고 관련 기관단체의 협조를 요청했다. 권혜민

江原日報

2023 07 19 ()
02도의회 접경지 개발지원특위
하반기 도내 사업 점검 나서

江原日報

2023 07 19 ()
10

홍천 북방농공단지 착공 홍천군은 18일 북방면 상화계리 21번지 일대에서 신영재 홍천군수, 박영록 홍천군의장, 이영욱·홍성기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방농공단지 조성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접경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고 도내 접경지역에 대한 하반기 사업을 점검했다.

김한수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군부대 개편에 따라 발생하는 미활용 군용지를 지역 성장의 근간으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내 한반도 생태 평화벨트 조성을 완료하고 지속 가능한 접경지역 관광자원 육성으로 DMZ 광역권 관광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또 연구용역이 미추진된 화천, 양구, 인제지역 경제특구 용역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엄운순 특위 위원장은 “접경지역 모든 지역이 경제특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현정기자

2023 07 19 ()
02

강원도민일보

특화단지 신청조차 못한 강원, 첨단산업 경쟁 밀릴까 근심

도, 인프라 미흡 공모 도전 무산
타 지자체 연계 효과 관망 처지
반도체 단지 원주시 인접 기대

정부가 오는 20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신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기술·기업 등 산업여건 미비로 특화단지 신청조차 하지 못한 강원특별자치도는 특화단지로 선정된 타 지자체와

의 협조에 의지해야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로 인해 강원은, 전국 각 지자체가 앞다퉈 뛰어든 첨단산업 경쟁에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리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신규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신규 지정 특화단지는 반도체와 2차전지, 디스플레이 3개 분야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기업세제혜택을 비

롯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국가 주도 전력·용수 인프라 지원이 이뤄진다. 전국 광역·지자체 15곳이 각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 뛰어들었지만 도는 관련 인프라 등이 미흡해 신청을 하지 못했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해당 특화단지 공모 조건으로 '기업과 기술이 이미 집적된 지역'을 내걸어 강원도는 신청의 폭이 제한적이었다"고 했다. 도는 특화단지 지정 결과통례의 주시하고 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전면으로 내걸은 상황에서, 특화

단지로 지정된 타 광역지자체를 매개로 '근접 연계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반도체 특화단지의 경우 강원도 입장에서 원주시에 인접한 곳이 지정되면 좋다"고 했다.

이와관련, 도는 경기도 용인을 중심으로 화성, 평택, 기흥, 이천을 잇는 '수도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벨트 연장으로 이전과 30분 이내 거리에 있는 원주를 포함한 '중부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안을 전략으로 삼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땅값이 비싸고, 전

력과 용수가 포화상태에 이른 만큼 수도권 기업들이 가까운 강원 영서 지역에 눈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반도체 분야는 성장과 침체를 반복하는 사이클 형태를 보이지만, 꾸준히 성장하는 분야"라며 "반도체 기반을 가꾼다면 반드시 강원도에도 기회가 있을 거라 본다"고 했다.

도는 광역지자체 전국 최초로 반도체 교육센터를 설립한 가운데 하반기부터 도내 대학 7곳이 참여하는 반도체 공유대학을 일부가동할 계획이다. 김덕형

2023 07 19 ()
01

강원도민일보

정선 산사태 주민 긴급대피, 영서남부 '심각' 경보

최근 정선 1만t 이상 낙석 발생
17일 밤 관음동마을 주민 대피도
영월·인제 토사유출 잇단 사고
국지성호우 연관 대응책 재검토

경북 예천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강원도 역시 산사태 취약 지역이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은 것으로 파악,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미 강원도내 일부 지역에서는 산사태 우려로 인한 주민 긴급대피까지 이뤄지고 있어 주민들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간에 많은 비를 쏟아내는 국지성 호우에 맞는 메뉴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8일 본지 취재 결과 강원도내 영서남부와 산지를 중심으로 산사태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됐다. 강원도는 더이상 산사태 안전지대가 아니다. 정선에서는 1만t 이상의 낙석이 쏟아지는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으며, 산사태 우려에 일부 정선 주민들은 긴급대피했다.

정선군 정선을 봉양리에 위치한 관음동마을 산사태 우려 지역 주민 15명이 지난 17일 긴급대피했다. 군은 지난 17일 오후 10시 50분쯤 정선군 관음동마을 인근 산사태 위험이 확인돼 주민대피를 결정, 다음날 오전 0시 10분까지 총 8세대 14명의 주민을 대피 안내했다. 해당 마을 이장 황모씨는 "아무래도 최근 정선에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하다보니 주민들이 불안감에 신고를 했다"며 "큰 일이 나지 않길 바라고 있다"고 했다.

지난 15일 영월군에서는 인근 야산에서 토사가 유출돼 총 6명이 일시 대피했으며, 같은날 오전 10시 30분쯤 영월

군 산술면에서는 주택이 침수되고 산사태 우려가 있어 4명이 마을회관으로 피신했다.

지난 15일 오전 0시 15분쯤 영월군 주천면에서 쓸려 내려온 토사에 고립된 주민이 구조되기도 했다. 지난 14일 오전 8시쯤 인제군 상남면의 한 주택은 인근 야산에서 유출된 토사가 주택 일부를 파손시켜 주민 1명이 마을회관으로 대피했다.

전문가들은 전국에서 산사태 위험지역이 두 번째로 많은 강원도가 최근 기후 변화로 국지성 호우까지 이어지면 서 산사태에 더욱 취약, 기존 대응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강원도내 산사태 취약지역은 올해 6월 기준 2892곳으로 경북(4935곳)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 2022년 기준 산사태 발생으로 인한 강원도내 피해 건수도 총 277건으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경기(556건)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특히 좁은 지역에 단기간 비를 쏟아내는 '국지성 호우'는 최근 경북 예천과 충남 논산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사태의 원인으로도 꼽혔다. 산사태 취약지역이 많은 강원도도 기존 산사태 대응체계를 재검토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윤천영 강릉원주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는 "좁은 지역에 많은 강수량을 쏟아내는 국지성 호우가 빈번해졌다"며 "정부 기관은 국지성 호우에 대한 예보능력을 기르고, 지자체는 산사태 위험지역을 지속 발굴·보완해 주민들에 인지도시켜야 한다"고 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최근 산사태 위험지역이 아닌 곳에서 산사태가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향후 사방사업과 산사태 위험 지역 조사를 확대해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했다.

유주현·신재훈·김덕형

江原日報

2023 07 19 ()

04

생계 지키다 급류 휩쓸렸는데 수해 피해자 아니라고?

자연재해 인명피해 기준 모호

최근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강원 지역에서 2명이 사망했다. 하지만 이들은 안전사고자로 분류돼 구호금 등 정부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5일 오전 8시22분께 원주시 신립면 황둔리에서 마을 주민 엄모(65)씨가 로프와 연결된 벨트를 착용하고 마을 길을 건너던 중 급류에 휩쓸렸다. 엄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소방당국에 따르면 엄씨는 장맛비로

원주 60대 장맛비에 진입로 막혀 굶은 소 먹이 주고 귀가 중 참변
지원금 수급 대상 제외 유족 반발 ... 道 “개인 부주의로 사고 발생”

인해 진입로가 막히며 며칠째 굶은 소에게 먹이를 주고 귀가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하지만 엄씨는 정부의 ‘자연재해 인명피해자’ 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실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폭우로 18일 오후 6시 기준 전국에서 사망 44명, 실종 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정부 통계에는 15일과 17일 원주와 정선에

서 급류에 휘말려 사망한 2명이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더라도 개인의 부주의로 발생했다는 판단에 따라 ‘자연재해 인명피해자’로 분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족 측은 “사고 발생 지점은 장마철마다 물이 넘치는 곳으로 시정에 다리를 설치해 달라고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생계수단을 지키려다

숨진 주민이 수해피해자가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수해피해자이고 지원 정책은 누구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자는 “폭우가 시작된 지난 13일부터 계곡이나 하천변 등의 출입 금지가 안내된 상황에서 엄씨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기에 수해피해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의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에 따르면 ‘본인의 현저한 부주의 및 고의·실수 등 귀책사유가 명백한 사고’는 자연재해 인

명피해자에서 제외된다. 홍수를 구경하다 실족해 사망하거나 통제 중인 다리나 도로를 무리하게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문제는 ‘개인 부주의’의 적용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백민호 강원대 소방방재학부 교수는 “동일한 유형의 사고여도 수해피해자 적용 기준이 애매해 지자체 등 관계당국의 판단이 엇갈릴 수 있다”며 “수해피해자 선정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재난대책기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준겸기자 lean@

2023 07 19 ()

01

江原日報



비 더 오면 버틸 수 있을까 최근 전국적인 폭우로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18일 춘천시 효자동 여름철 인명 피해 우려지역 등 특지의 노후한 주택들이 위태로워 보인다.

신세희기자

2023 07 19 ()

01

江原日報

39개 마을 '비만 오면 붕괴될까' 불안

도내 인명 피해 우려 423곳

특보 발령되면 대피생활 반복

정비 사업 비용 7,616억 추산

막대한 예산에 20년 이상 소요

道“정부 지원 지속적으로 요청”

산비탈과 급경사지 등 붕괴위험지구에 거주하는 강원도민이 39개 마을, 537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붕괴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정비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7,6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대규모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방재 분야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가 절실하다.

강원자치도가 18일 현재 관리 중인 급경사지 현황과 인명 피해지역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강원지역의 집중호우 시 붕괴 및 인명 피해 우려지역은 423곳에 달한다.

이 중 실제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은 39곳으로 집계됐다. 영월이 7곳(직동2리, 문곡1리, 마차2리, 토교4리, 쌍용4·5리, 주천리)으로 가장 많다. 춘천 5곳, 강릉 5곳, 삼척 5곳, 양구 4곳, 태백·화천·고성 각 3곳, 원주·홍천·평창·양양 각 1곳 등이다. 이 지역에는 현재 537명의 주민

이 거주 중이다. 태백 삼방동지구는 가장 많은 64명이 살고 있다. 지역별로 대피 기준은 다르지만 이 지역 거주민들은 통상 시간당 30mm 이상의 비가 내리거나 호우경보가 발령될 경우 매년 집을 떠나 대피하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다.

정비 사업을 통해 붕괴 위험을 줄이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 대책이지만 막대한 예산이 들다 보니 사업 추진이 더디기만 하다.

강원자치도는 2012년부터 지난해

까지 10년간 총 4,297억원을 들여 도내 215개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정비 사업을 마쳤다. 50%는 국비로 지원되지만 지방비 소요 예산도 수천억원에 달하다보니 매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올해는 505억원을 투입, 82개 지역에서 정비 사업을 벌이고 있다. 아직 정비 사업이 이뤄지지 않은 붕괴 및 인명 피해 우려지역 423곳의 정비를 모두 마치려면 7,616억원이 필요하다.

현재 정비 사업의 속도로는 2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추산된다. 더욱이 기존에 10%였던 도비 부담이 올해부터 25%로 늘어난 데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인해 방재 사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강원자치도 관계자는 “재난에 대해서는 발생 전 예방이 가장 중요해 투자를 줄여서는 안 된다”며 “급경사지와 붕괴위험지역 정비에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부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최기영기자

江原日報

2023 07 19 ()
01

GTX-B 노선 춘천 연장 막바지 검토 ... 국비 반영에 사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연구용역 마무리 단계 ... 市 국토부에 국가사업 건의

속보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B 노선 춘천 연장(본보 6월 19일자 10면 보도)을 판가름할 연구용역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강원 영서북부지역의 수도권 연결을 강화할 GTX-B 노선 춘천 연장의 국비 반영을 위해 강원자치도와 춘천시는 사활을 걸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한국교

통연구원을 통해 GTX 확충 통합기획 연구 용역을 진행하며 춘천 연장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 왔다.

해당 용역은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6-2035년) 수립을 위한 사전 절차다. 통합 기획안에 춘천 노선이 반영될 경우 정부 재정 지원이 확실시된다. 당초 6월 완료를 목표로 용역이 진행돼 온 만큼 최종 검토 단계에 이른 것으로 전망된다.

춘천시는 지난해 주 국토교통부 광역급행철도추진단을 찾아 GTX-B 노선 춘천 연장의 자체 타당성 조사 결과를 전달하고 국가 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에서 진행 중인 GTX 확충 통합기획 연구 용역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다.

GTX-B 춘천 연장은 4,300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수반돼 조속한 착공을 위해선 국비 지원이 필수적이다.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면 국비 70%를 확보할 수 있

어 강원자치도와 춘천시가 내야 할 몫은 600억원대까지 낮아진다.

앞서 춘천시가 경기 가평군과 공동 실시한 사전타당성조사에서 GTX-B 노선 춘천 연장의 비용대비편익(B/C) 값은 1.12로 나타났다. B/C 값이 1을 넘는 투자 사업은 경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윤여준 춘천시 도시건설국장은 “수도권 관광객 증가를 고려하면 교통 인프라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윤호기자

江原日報

2023 07 19 ()
02

오색케이블카 9월 모든 절차 끝난다

산림청 백두대간 개발행위 협의 절차 승인

속보 = 산림청이 오색케이블카의 백두대간 개발행위 협의 절차를 승인했다.

남은 절차는 산림청 국유림 사용허가, 국토교통부의 특별건설승인, 국립공원공단의 공원사업 시행허가 등으로 돌발 변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 올 9월 중 모든 절차가 완료(본보 6월 14일자 1면 등 보도)될 전망이다.

18일 강원특별자치도와 양양군에 따르면 산림청은 오색케이블카 백두대간 개발행위 사전 협의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공사와 운영 중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하는 단

서가 달렸지만 사업 이행 시 현재 계획을 준수할 경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 산림청의 판단이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지역은 백두대간 보호지역 핵심구역으로 산림청과 환경부의 동의 없이는 건축, 시설물 설치 등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산림청의 동의로 빗장이 풀리게 됐다. 남은 절차는 국유림 사용허가와 국토부 건설승인, 국립공원공단의 공원사업 시행허가 등 3개 절차다.

산림청 권한인 국유림 사용허가는 다음 주 중 신청 예정이며 백두대간 개발행위 승인까지 마무리된 만

큼 차질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국립공원공단 공원사업 시행 허가는 국유림 사용허가를 마친 후 신청할 수 있어 다음 달 중 절차가 이뤄진다. 국토부의 특별건설 승인은 통상 두 달 이상 걸린다.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8월 초에는 국토부에 신청하면 9월 중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3개 절차만 마치면 강원자치도와 양양군의 목표대로 오색케이블카가 착공이 가능해진다.

양양군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대부분의 조건과 절차를 충족해 남은 절차는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

국비 매칭사업 급급 킬러 콘텐츠가 없다

(하) 특화사업 부족

지자체 사업 1억~3억 소규모
문화는 ‘청년 예술인 지원’뿐
각 시·군 장점 살린 정책 시급

강원지역에 청년 정책 전담 부서가 없어 ‘특화 사업’ 발굴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지역 특성을 살리고 고유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전략, 정책이 미흡하다.

본보가 강원특별자치도가 수립한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2021~2025년)과 올해 사업 시행 계획을 분석한 결과 5개 분야 청년 정책(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48개 중 절반은 국비 매칭 사업이었다. 지자체 예산을 들인 사업들은 ‘청년 구직활동 지원(32억원·미취업 청년 300만원 지원)’, 청년 농업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10억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억~3억원 규모였다.

국비 매칭 사업을 추진하는데 급급하거나 소규모 자체 사업 위주로 짜인 구조다. 특히 문화 관련 사업은 ‘청년 예술인 지원(2억원)’이 유일해 여가 생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면서 청년들이 유입, 정착

하는 과정에서는 곳곳에서 지원 공백이 생긴다. 이는 인프라가 도시보다 훨씬 열악한 농촌에서 발생한다.

강원자치도 내 농대를 졸업하고 춘천시 사북면 고성리에서 2년째 살고 있는 청년 창업농 조모(32)씨. 농지은행에서 땅을 연 23만원에 빌리고, 지인에게 비닐하우스를 무상으로 빌려 창업 초기 자금은 500만여원 정도였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청년 창업농 영농정지원금을 매월 100만여원씩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후계농업인들에 비해 농업 기술이 부족하고, 판로 개척도 어려워 농사를 지어도 수익은커녕 빚만 쌓이고 있다. 조씨는 “농사를 지으며 농촌에 정착하려고 보니 곳곳에 난관이 많다. 그나마 미혼이니 시도하지 결혼했으면 어려울 것”이라며 “강원도 농촌에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게 만드는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경배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촌의 유희 공간을 활용한 ‘친환경 스마트 청년 위케이션(일하면서 휴식)’ 프로그램 개발 등 각 시·군 고유의 장점을 살린 청년 유입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신하림·김오미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 07 19 ()
04

민사고 대안학교 전환 배경 ‘정치영향 탈피 vs 지역선발 회피’

2025년 신입생부터 모집 추진
교육철학 유지 입장 해석 분분
교육청 “교육부 질의 의견 취합”

속보=민족사관고등학교가 대안학교 전환을 추진(본지 7월 18일자 웹보도), 배경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학교 측은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로운 학교 운영을 내세우고 있지만 강원도내 교육계에서는 ‘지역인재 20% 의무선발을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꼼수의혹

도 제기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본지 취재결과 민사고는 최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안학교 지정 절차 문의 및 전환 의사를 전달했다. 민사고가 대안학교로 변모하려는 이유는 설립자의 교육철학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지난 1996년 개교한 민사고는 문재인 정부가 2025년까지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헌법소원에 나섰다, “대책이 없다면 폐교하겠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석열 정부가 자사고 존치를 결정했음에도 정권에 따라 지위가 흔들

리자 상대적으로 정책에서 자유로운 대안학교로 바꾸겠다는 것이 학교의 입장이다. 한만위 민사고 교장은 18일 본지 기자에게 “정책이 바뀌면 언제든 지일반고가 될 수 있다. 꼼짝 못하고 전환할 바에는 대안학교가 되는 게 낫다는 생각”이라 밝혔다.

민사고는 빠르면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 대안학교로 모집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사고가 고려 중인 대안학교 모델은 학력이 인정되는 인가형이다. 교육부의 기본교육과정을 따르기 때문에 학력이 인정되며 정부 지원도 받

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민사고 내부 구성원들과 도내 교육계에서는 이번 대안학교 전환에 대해 “정부의 자사고 지역인재 의무선발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문제제기에 나섰다.

올해 초 정부는 지역 고교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 전국 단위 모집 자사고가 지역 인재 선발을 의무화하도록 하겠다는 방안을 밝혔다. 의무선발 비율은 20% 수준이 될 전망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자사고 폐지 후 대안학교 전환은 전국적으로 전례가 없다”며 “교육부에

절차와 전환 가능 여부에 대해 공문으로 질의할 예정이고 교육부 의견이 오면 여러가지 의견을 취합할 것”이라고 했다.

한만위 교장은 제기된 의혹에 대한 즉답은 피하면서도 “강원도 인구가 전국의 3%다. 현재 민사고 신입생의 5~7% 정도가 강원도 학생이다. (의무선발이) 확정된 정책은 아니지만 20%를 뺄게 되면 학교입장에서는 부담이 된다. 뺄더라도 학생들이 적응을 할 수 있을지 등 여러 문제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민영

강원도민일보

2023 07 19 ()
04

고성 통일전망대 220m 출렁다리 조성 본격화

평화통일 염원 모습 형상화

2000만 관광시대 개막 기대

고성 통일전망대에 길이 220m 규모의 출렁다리가 설치된다.

18일 고성군에 따르면 통일전망대에 서산·바다 절경을 만끽할 수 있도록 출렁다리를 설치하는 'DMZ 생태관찰전망대'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고성군은 미확인 지뢰지대 지뢰 탐사 등 관련 인·허가를 마치고 지난 6월 30일 조성사업에 착공했다. 총사업비 81억원이 투입돼 오는 2024년 완공 예정이다. 출렁다리와 전망데크가 조성된다.

통일전망대는 연간 100만명이 방문하는 고성 대표 관광시설인 만큼 DMZ 생태관찰전망대가 완공되면 2000만 관광객시대를 여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태관찰 출렁다리는 220m 길이의 '2주탑 현수교' 형식으로 조성된다. 양쪽 주탑에는 '미래로 세계로'라는 상징



고성 'DMZ 생태관찰전망대' 조감도.

적 디자인이 가미됐으며 두 팔을 모아 올려 평화통일 염원하는 모습이 형상화됐다. 주탑 상단에는 한반도 조각이 담긴 대형 링이 설치된다.

고성군은 향후 통일전망대 출렁다리 ~DMZ 박물관 7.5km 구간을 연결하는 탐방로 조성사업도 기본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함명준 군수는 "전략적 투자를 통해 통일전망대 일대를 국내외 대표 DMZ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며 "2000만 관광도시 고성 건설을 목표로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산

江原日報

2023 07 19 ()
02

“연이은 비에 손님 뚝” 雨환에 잠긴 전통시장

우산들고 장보기 불편... 소비자 대형마트로 발길 돌려
상인들 “휴가 대목 날려”... 경기전망지수 울들어 최저

연일 이어지는 곳은 날씨에 강원 특별자치도 내 전통시장 상인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소비자들이 냉방 시설이 있는 대형 마트나 온라인 쇼핑 등으로 눈을 돌리면서 휴가철 효과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

18일 오전 방문한 춘천 동부시장. 상인들은 가만 위로 빗물막이 천막을 펼치고 손님맛이를 마쳤지만 길을 오가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웠

다. 그나마 한두 명 보이던 손님들도 우산을 써야 할 정도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자 금세 발길을 돌렸다.

가게 앞에 앉아 비 내리는 하늘을 바라보던 생닭집 사장 심모(70대)씨는 “삼복 중 가장 장사가 잘 되는 초복을 비 때문에 망쳤다”며 “날씨가 안 좋으니 시장에 사람이 돌아다니질 않는다. 코로나19도 끝나 경기가 좋아질 줄 알았는데 실망이 크다”고

한숨을 쉬었다. 신발 가게를 운영하는 박모(79)씨 역시 “지나해 휴가철을 앞두고 신발을 사려는 손님이 많았는데 올해는 비 때문인지 손님이 전혀 없다”며 “아무래도 우산까지 들고 물건을 사기 불편하니 다들 마트를 가는 것 같다”고 푸념했다.

인근에서 20년째 생선 가게를 운영 중인 이모(60)씨는 “손님이 아예 없다. 장마에 오염수 방출, 경기 침체까지 삼중고에 죽을 맛”이라며 “장사 시작하고 20년 중에 올해가 최악”이라고 말했다.

다른 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원주 도래미시장에서 건어물 가게를 운영하는 김모(51)씨는 최근 손님이 10분의 1로 줄었다. 김씨는 “전통시장은 걸어다니면서 물건을 사야 하는 특성상 날씨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며 “계속되는 비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고 토로했다.

여름철 대표 휴가지인 동해안도 긴 장마에 어려움을 겪는 건 마찬가지다. 강릉 안목항에서 7년째 편의점을 운영하는 정모(50)씨는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매출이 턱없이 떨어졌다”며 “코로나 이전에는 500~600개의 물건이 판매됐는데 요즘은

300~400건으로 줄었다. 최근에는 곳은 날씨로 매출이 더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어려움은 데이터로도 확인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도내 전통시장 상인들의 7월 전망경기지수는 올 2월 이후 가장 낮은 67.7로 집계됐다.

이극상 강원도소상공인연합회장은 “길어진 장마로 유동인구가 감소한 데다 전국적으로 수해가 발생하며 외지 방문객이 줄고 소비 심리도 위축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현아·김설영·류호준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 07 19 ()
/ 19

차상찬 선양 사업 기대 크다

-춘천시기념공간 조성, 활동 다양화 필요

춘천 출신 청오 차상찬 선생을 기리기 위한 사업이 펼쳐져 관심을 모읍니다. 춘천시는 대표적인 항일 운동가이자 언론인으로 활동했던 차상찬의 사상과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선양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그의 활동에 걸맞은 역사적 위상을 찾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 사업을 통해 제 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여론입니다. 더구나 민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기념사업을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맡기로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향후 다양한 선양 활동을 통해 선생의 철학을 연구하고, 일제강점기 한국 언론의 항일 투쟁사를 본격적으로 재조명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춘천시는 연말 재개관 예정인 춘천시립청소년도서관에 차상찬 기념공간을 구축, 선양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곳에 차상찬과 관련된 책과 자료 등을 비치, 도서관을 찾는 이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청오 차상찬 기념사업회와도 협의할 계획입니다. 시가 선양에 나서면서 그동안 민간단위에서 이뤄져 오던 차상찬 기념사업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춘천 출신인 청오 차상찬(1888~1946년) 선생은 개벽장간 동인 중한

명으로 초기 편집국장을 맡았습니다. 당대 저명인사들의 일거수일투족과 세태를 기사화했고, 항일 사상을 고취했습니다. 잡지 '어린이', '별건곤', '신여성'을 집필했으며, 소파 방정환 선생과 어린이날 제정에 앞장서는 등 미래 세대인 어린이에 대한 애정을 보였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수많은 매체에 글을 게재하면서, 71개의 이름을 사용한 국내 최대 필명 보유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에서는 기념사업회와 춘천문화원 춘천학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선생에 대한 연구와 추모 사업이 이어졌지만, 활동에 비해 그의 업적이 잘 알려지지 못했습니다.

선생의 선양사업이 기념공간 운영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간단체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그의 사상을 연구하는 일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정기적인 세미나와 포럼, 책자발간 등 선양사업이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춘천 공지천 조각공원에 세운 선생의 동상을 관리하고 명소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어린이에 대한 선생의 관심과 활동을 토대로, 춘천을 한국을 대표하는 어린이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 07 19 ()
/ 19

지역소멸대응기금 축소 신중해야

-지역 활성화펀드 조달... 인구감소지 불이익 우려

정부는 국가재정에 민간의 자금을 더 하는 지역 활성화펀드를 조성하고, 자치단체와 민간 주도의 투자 프로젝트 발굴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지자체는 사업을 발굴·기획하면서 인허가 단축등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지역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의욕적인 방안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 지원하고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일부를 떼어내 펀드의 재원을 만드는 방안을 기정사실로 해, 도와 지자체가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응기금이 줄면 강원도 몫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도내 소멸 위기 지역에 불이익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정부는 최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를 내년 상반기에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펀드는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조성한 모(母)펀드와 민간과 지자체가 자본을 투입해 만든 프로젝트펀드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공공부문이 지역 주도 사업을 위한 '현금 실탄'을 마련해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고, 지자체와 민간이 주도적으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입니다.

문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일부를 투자펀드 재원으로 충당하는 데 있습

니다. 중앙부처는 이미 지방소멸대응기금 유용액수와 배분 방식 변경 등 세부 사항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실현되면, 전체 지방소멸대응기금 1000억원 중 때 강원 지역의 몫이 최대 141억원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난 2022년에 신설된 1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입니다. 올해 강원 본청은 광역단체분 2500억 중 345억, 춘천 원주를 제외한 도내 16개 시군은 기초단체분 7500억 중 1064억을 받았습니다.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성격이 다른 자금입니다. 소멸 대응기금이 축소하면 그동안 지원했던 사업들도 동시에 위축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쓰이고 있는 기금의 특성상, 지역 경기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기획재정부와 지역투자활성화펀드에 투입할 지역소멸대응기금 규모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곧 광역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기금 배분을 구체화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협의 과정에서 기금 축소로 인해 소멸 위기 지역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책적 고려를 해야 할 것입니다. 도와 지자체도 소멸대응기금의 필요성을 강조해 축소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江原日報

2023 07 19 ()

/ 19

월세 새는 실업급여 부정 수급, 이제는 손볼 때다

도내에서 실업급여 부정 수급 2,116건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동안 춘천·원주·강릉·태백·영월지역의 실업급여 부정 수급 적발건수는 1,781건으로 이들이 받은 급여만 22억6,890만여원에 달한다. 올해도 335건의 부정 수급 사례가 적발, 6억1,586만여원의 실업급여가 부정 수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에는 사업주 지인들이 근로자로 둔갑해 실업급여를 수령하거나 실업급여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례 등도 포함돼 있었다. 실업급여는 실직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 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하지만 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실업급여를 받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고 있었던 셈이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 문제가 심각하다. 이전부터 개선해야 할 사안으로 지적됐지만 근절되기는커녕 최근 다시 늘고 있는 추세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2020년부터 정부가 고용환경이 녹록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실업급여액과 지급 기간을 확대하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실업급여 신청자 역시 급증하고 부정 수급자도 덩달아 많아지고 있다. 국민의 세금이 줄줄 새고 있었던 것이다. 5년간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반복 수급 사례도 24.4% 증가했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수급 기간 내 재취업률도 낮았다. 실업급여로 받는 돈이 일할 때보다 많은 역전 현상도 나왔다. 6개월 일하고 난 후 실업급여를 받는 행태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일하는 재미보다 놀고 먹는 ‘베짱이’를 챙겨주는 시스템이 되고 있었다. 이대로라면 정작 실업급여가 절실한 사람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

당정이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실업급여 기준액과 지급 기간 단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서다. 제도 개편을 통해 실업급여가 ‘베짱이’를 줄이고 당초 취지대로 재취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검토에 나서야 한다. 이미 실업급여는 다양한 문제점을 양산하면서 빨리 치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급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실업급여를 악용하려는 이들을 시스템으로 차단해야 한다. 실업급여가 악용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실직자

도내 2021년부터 현재까지 2,116건 적발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시스템 돼선 안 돼

실직자 생계 안정·재취업 지원 취지 살려야

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가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나 불공정을 낳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구직자들이 구직보다는 실업급여에만 ‘올인’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을 이제는 손볼 때다. 다만 수급요건 강화에 저임금·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완책 마련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실업급여는 서민들에게 더욱 절실한 사회보험이다. 취약계층의 최소한의 생계에 필요한 복지 정책은 유지돼야 한다. 실업급여는 성실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을 때에도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 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만들어 주는 기본 장치다. 노동시장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실업급여를 지나치게 삭감하거나 폐지한다면 수많은 노동자가 생활고를 겪을 것이다.

江原日報

2023 07 19 ()

/ 19

전통시장 경쟁력, 시장별 장점 살린 특화에 달려

강릉시가 최근 8개 전통시장의 시장별 장점을 살려 특화 발전시키기로 했다. 사회가 급속도로 변함에 따라 재래시장도 변화가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인식이다. 강릉 도심에는 중앙시장, 성남시장, 서부시장, 동부시장 등 4개 시장이, 주문진에는 수산시장, 건어물시장, 종합시장, 좌판품물시장 등 전통시장 4개가 있다. 강릉시는 중앙·성남시장은 MZ세대 소비층까지 흡수하는 관광형 시장으로, 서부시장은 문화·청년 중심의 시장으로, 주문진권 시장은 야시장 활성화 공모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동부시장은 장기적인 도심 재정비사업을 위해 힘쓴다는 방침이다. 긴 안목으로 재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에서 강릉시의 대책이 주목된다.

고객 수준에 알맞은 양질의 품질 관리와 서비스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원동력이 된다. 보통 재래시장은 먹거리와 볼거리를 비롯해 인심 좋고 값싸고 훈훈한 정이 넘치는 고향의 향수를 맛보는 곳으로 인식돼 있다. 하지만 고객 발길은 편리한 대형 마트나 백화점 등으로 옮겨 가는 추세다. 이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객을 위한 작은 문제부터 개선하며 발상의 전환으로 접근해야 할 때다. 재래시장은 한 도시의 전통과 역사, 그리고 생활의 정취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공간이다. 에콜

로지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냉난방기의 가동을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대형 유통점에 비해 에너지를 절약하는 그린시장이다. 대화 없이 기계가 찍어내는 가격에 따라 돈을 지불하는 쓸쓸한 도시의 모습이 반영돼 있는 대형 유통점과는 다른 공간이다. 접속은 많아도 접촉이 없어 외로운 도시 사회에서도 재래시장은 흥정이 있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정서의 공간이다. 따라서 재래시장이 사라진다는 것은 지역의 정서와 문화 그리고 상징적 공간이 사라지는 것이다.

재래시장의 문제를 단순히 상업의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해결책이 없다. 대형 유통점을 억제하고 시설의 현대화를 추구하는 것만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는 어렵다. 재래시장을 고객이 교류하는 장소가 되도록 해야 한다. 주부들을 위해 아이를 잠시 맡아주는 서비스를 하고, 시장 내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 책을 빌리면서 장도 보게 해야 한다. 복지시설을 유치시켜 노인들이 일상으로 지나다니게 하고, 아이들과 주부들에게 식문화 전파하는 평생학습시설도 함께하게 해야 한다. 이 용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서서 방향을 다시 설정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재래시장의 활성화는 지역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해결책이 없다.